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즉답829-7575
010-2672-2250

2023

12

Monthly
Magazine

통권 241호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문 (금융위원회)

[주요정보]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과 기업의 공시 준비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 조세 정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 · 금융자문 · 인수합병 M&A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중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정 훈 ·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 · 고두환 · 공희성 · 권창현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배익권 · 송형곤 · 설찬수 · 양승민 · 오승혁 · 유진우 · 유지운 · 윤형민 · 윤훈기 · 이만선 · 이마지 · 이샤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정운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진수미 · 최영진 · 최진강 · 표정협 · 한상표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광영미 · 이현섭 · 배문호 · 최민욱 · 황준호 · 정호신 · 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허정식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이승환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중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5.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외감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7.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8.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M&A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기타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1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15(금)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거래대금에 10%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2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3
-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상반기 6개월 가결산 중간예납방법 4

이 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5

이달의 특집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23

경영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 132

회계정보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과 기업의 공시 준비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137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11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거래대금에 10%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 안세재경저널 2023/11/15일자 통권 1649호(표지)

개념, 구분(조문)	과세방법,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손금산입문제
부가세 거래개요 (부가세법 제4조)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조·판매·공급자는 거래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며, 판매를 위한 제반매입원가의 10% 부가세는 차감함(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
매입세액공제 (부가세법 제38조)	사업 연관 목적으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 해당액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만 차감정산되므로, 공제 안받고 임의로 비용처리 한 것은 비용불산입함)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미발급, 사실과 다른 기재, 사업무관지출,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등, 면세사업용 구입, 사업자등록신청전 구입
적격거래증빙 등	적법세금계산서(부가세법 제32조), 영수증 등(부가세법 제36조),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법 제46조)
필요경비불산입(개인) (소득세법 제33조제9호)	사업상 구입액이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불산입 열거(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적격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으로 종결, 임의·실수로 매입세액공제받지 않고, 비용 반영해도 필요경비 인정안됨)
법인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공과금의 조건없는 손금불산입 열거사항(① 법인세, ②벌금, 가산세 등,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액은 순자산감소의 손금이 아니고, 매출세액에서만 차감되어야 함

손금산입가능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액 중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소형차 구입유지 등, 기업업무추진비 등)
적법요건 미비시	매입세액 중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미발급, 사실 아닌 경우 등은, ①매입세액도 불공제되면서, ②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 원천적으로 손금불산입됨
업무무관지출 등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업무무관비용이니 필요경비부인(법인은 손금불산입됨)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 안세재경저널 2023/11/22일자 통권 1650호(표지)

개념구분	과세방법 개요, 비과세 요건 등,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① 거주자 +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공유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② 1주택을 2년 보유숙 2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거래가 12억원 한도)으로 양도세 비과세
1세대의 판단	생계공유가족임(단 ① 가족 중 나이 30세 이상, ② 배우자 사망·이혼, ③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봄)
한집 2세대	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세대가 별도 1주택 소유시 생계공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안되지만, 각각 독립된 생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각각 판단함
보유·거주	보유기간 2년 이상 기간에 거주기간 2년 이상(임대주택은 5년 보유, 취학·근무이전·질병 등은 1년 이상, 해외출국인 경우 거주기간 없고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
주거이전 2주택	이사목적 집 사고 팔기(기존주택 1년 이상 후 신규취득 + 신규취득 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처분)
상속된 1주택	상속 1주택은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상속 2주택이면 과세
동거봉양합가	1세대주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하면, 합가일부터 10년 내 양도는 비과세

결혼합가	각 1주택자끼리 결혼시 결혼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는 비과세
문화재 주택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농어촌 주택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귀농·이농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영어 목적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상반기 6개월 가결산 중간예납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3/11/29일자 통권 1651호(표지)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1.1.~12.31)	법인(주로 12월말 법인)
중간예납 규정	소득세법 제65조	법인세법 제63조
대상소득범위	사업소득임(근로소득, 금융소득, 3.3% 사업소득 등은 제외)	모든 법인 해당
중간예납기일	매년 11월 30일(모두 동일)	주로 매년 8월 31일(결산기일부터 8개월)
중간예납기준액	(전년중간예납 + 확정자납 등)×1/2	(전년 법인세액 - 감면 - 원천징수)×6/전년도 사업월수
6개월 가결산	상반기 손익 악화시 6개월 가결산의 1년 환산소득×누진세율×1/2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좌동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 신고	전년도 반 납부액이 계산되거나, 가결산도 전자신고함	좌동(전자신고해야 관할세무서가 50만원 미만인지 판단가능)
중간예납 기준액 미달	산출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소득세법 제86조) : 세무서가 납부통지 안함	전년도의 반납이나, 6개월 가결산결과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납부면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분납가능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이나 50%가 자동분납 고지됨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중간예납 1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이나 50% 분납가능 (법인세법 제64조 제4항)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 (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 증여 ·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개요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2조), 총 50만 명(세액 4.7조)에게 11.23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인원(천 명)			세액(조 원)		
	'22년	'23년	증감	'22년	'23년	증감
주택분	1,195	412	△783 △65.5%	3.3	1.5	△1.8 △54.9%
토지분	115	106	△9 △7.9%	3.4	3.2	△0.2 △4.9%
합 계	1,283	499	△784 △61.1%	6.7	4.7	△2.0 △29.4%

※ '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손택스)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 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 없이 ☎ 126 (ARS-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ARS-2번-1번)

참고 1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년	'23년	'22년	'23년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분	'22년	'23년
지방 저가주택 범위	·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 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22년	'23년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과세 여부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100%
=	=	=	=
중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세 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5	-	0.5	-	15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45억 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원
	94억 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증부세) × 150%]을 초과하는 세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서울	누진공제	과세표준	서울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2.7	5.0	15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1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94억 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세부담당한 초과세액	해당없음	150% ☞과세대상 유형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 추가)되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완화(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Q5.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Q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과세유형별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중부세액 합계액 (재산세 + 중부세)	≤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중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 + 중부세) X 150%
--	---	---

Q7.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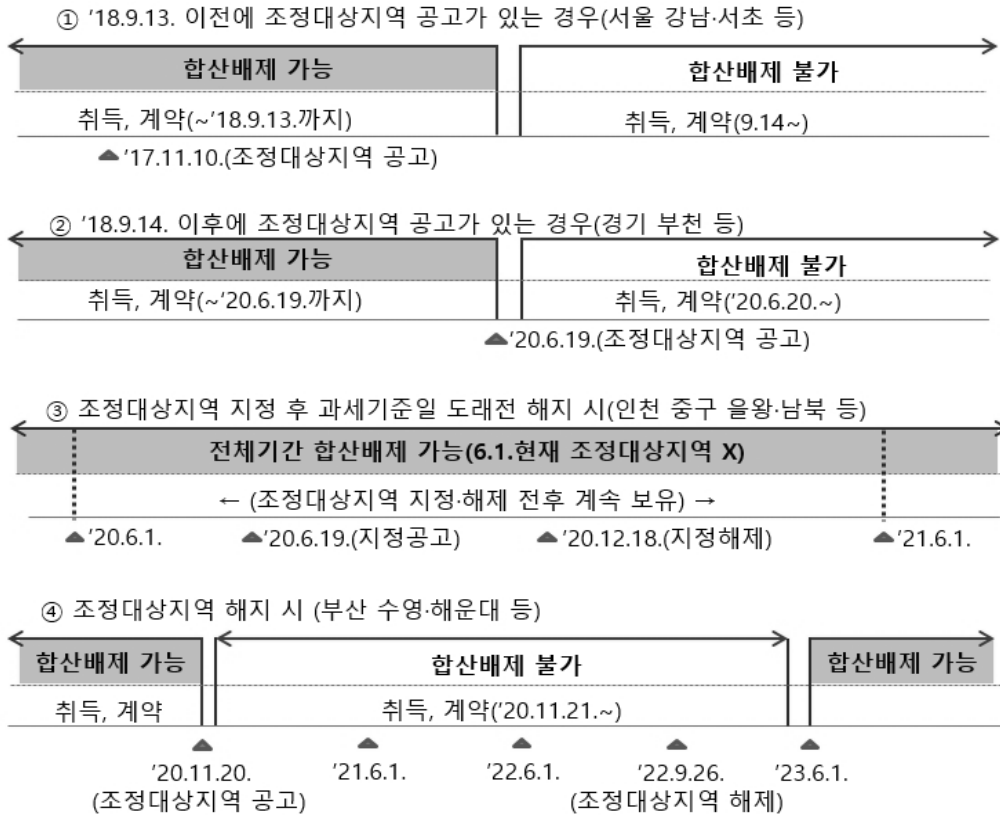
-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



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Q10.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Q11.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된 경우는?

-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3.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1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5.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7.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8.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Q19.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화))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Q20.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Q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22.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Q23.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4.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25.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달의

특집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금융위원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
2.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한회사는 같은 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및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

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4.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회사에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시하는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
 4.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⑦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상태이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⑩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회계법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4등분한 금액을 그 분기가 시작된 달의 말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정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 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 라. 회사의 대표자는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다.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③ 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의 현황
2.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증빙자료

④ 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이 정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금융감독원은 영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신청인에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요구할 자료

⑧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영 제11조제3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이 신청인에 등록신청서에 있는 흠결(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완할 것을 신청인에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한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2. 금융감독원이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3. 금융감독원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
4.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

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 그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소송이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해당 기관이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1.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 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인원 수(數)보다 많은 경우에 감사는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또는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규 또는 정관에 따라 위원을 정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 사유
2.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데 동의한 위원의 명단 및 서명

④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2. 그 밖의 회사 :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

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
2.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 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과거 3년간"이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감사인 지정"이라 한다)할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지정대상 선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⑨ 지정대상 선정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이하 이 조에서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
2. 감사인 지정 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을 것
 3. 피신청인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 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 소속된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4. 기관투자자가 피신청인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서로 확약한 경우
- ②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개황
 2. 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증빙자료(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감사인 지정 이유
- ③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피신청인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감사인 지정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
 2. 감사인 지정이 피신청인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
 3. 제2항제3호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것
- ⑤ 기관투자자 또는 주채권은행(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영 제14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제27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나. 직원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나. 직원 :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임원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나. 직원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가.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나.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이 시행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 해에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 ④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처리계획 등을 매년 3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란 업무정지를 말한다.
- ⑦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⑧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 공소의 대상이 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를 시작한 날부터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에서 제외
2. 영 제16조제2항제2호 : 별표 4 제4호나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3. 영 제16조제2항제3호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째 되는 날부터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4. 영 제16조제2항제4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부과
 - 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
 - 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 이 경우 별표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지정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회사를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포함한다.
 - 다.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

⑨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 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별표 4 제2호의 표에서 가군이 아닌 경우에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가.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나군인 경우 :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나.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다군인 경우 : 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다.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라군인 경우 : 가군, 나군 또는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마군인 경우 : 가군, 나군, 다군 또는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4. 회사가 속하는 군이 별표4제1호의 표에서 가군이 아닌 경우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정한다)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가.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나.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나군 또는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다.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라.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나군, 다군 또는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다군 또는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바.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사.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나군, 다군, 라군 또는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아.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다군, 라군 또는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자.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라군 또는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 차.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가 회계법인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 하는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⑥ 영 제17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기준일(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는 날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이하 같다) 1년 전까지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감리집행기관"이라 한다)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⑧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감사인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후 2주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영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인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와 함께 논의한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업수의 예외)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된 정보가 협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제공된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될 것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해당 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외의 회사
3.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22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① 회계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회계법인은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
2. 이사의 보수
3.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 담당 인력
4. 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원 수
5. 심리(審理)체계

③ 투명성 보고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영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 감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제4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⑦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 ⑧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

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써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⑤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⑥ 감리집행기관은 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전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 나. 주권상장법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 해당 감사보

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와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와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심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결과를 관련 금융회사 감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의 위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5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3.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
 6.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명
 7.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감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 및 감리집행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전을 상정하며, 해당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전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소속
3. 안전별 주요 논의내용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전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예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들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4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① 법 별표 2 제5호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② 법 별표 2 제5호 후단에서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사후관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권고 :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 가. 임원의 면직 권고
 - 나. 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다.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 라.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

3. 감사업무 제한 :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1개월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공정거래위원회
3. 국세청
4. 한국공인회계사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2. 거래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14. 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및 채권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영 제44조제2항제1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재무제표 심사 결과에 따른 법 제29조제1항의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44조제2항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3.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신고·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 업무
 4. 영 제44조의 위탁업무 또는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업무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작성하여 매년 1분기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매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말 : 영 제4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2. 5월말 :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9월말 : 영 제44조제2항제8호·제12호·제14호의 업무

⑧ 한국거래소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지원)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감리결과 조치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감리결과 조치와 관련된 소송업무
3. 그 밖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수당)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제2020-50호, 2020. 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 별표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

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인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 7) 감사조서 관리
-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 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 1) 주권상장법인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3) 금융회사
 -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 4) 교육시간
 -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6)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2]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제12조제9항 및 제15조제7항 관련) <개정 2019.

4. 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대상 사업연도	지정기준일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영 제14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	회사 등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영 제14조 제6항제2호 및 제6호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라.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비고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영 제14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3.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사인 지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4.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감사의견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회사는 다목에 따른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 가.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로 한다.
 - 나.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 다.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개정 2022. 9. 29.>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감사인지정 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경력기간 40년 이상	경력기간 30년 이상	경력기간 20년 이상	경력기간 15년 이상
100	110	120	115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10	105	100	80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 (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 1) 상위 15% 이내인 경우 : 10%(단,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
- 2) 상위 15% 초과 30% 이내인 경우 : 5%(단,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3%	6%	9%	12%	15%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까지	5천억원 미만
가중치	3배	2배	1배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비고

-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한다.
 -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1)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영 제17조

제7항제1호, 제1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받는 회사(이하 "미선임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 = \frac{\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 회사 수에 별표 3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2)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frac{\text{해당 회계법인 직전년도 지정회사 수}^*}{\text{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의 총 지정회사 수}^*} \times 100$$

* 지정회사 수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동일 회사를 2회 이상 지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미선임 회사로 지정 받은 회사 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 4)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가중치 최대	I	II	III	IV	V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60점
-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 3)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

[별표 4의2]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신설 2022.

9. 29.>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및 미선임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를 우선 적용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 회계법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에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은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나.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 대상에 포함할 것

다.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없을 것.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아니한 일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의 직전년도 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일반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일반 회계법인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1개사를 추가로 우선 지정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일반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년 10월 1일부터 1개 회사씩 지정한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지한다.
6.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하는 회사 수는 매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의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 받지 않은 회사는 별표 4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8. 이 별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제15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지정한다.
9.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라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회사 수 이상인 일반 회계법인에는 추가로 회사를 우선 지정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에 이 별표에 따른 감사인 지정 방법에 관하여 별표 4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적용한다.

[별표 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제22조제1항 관련)

1. 조직·인력·예산
 - 가.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 나.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 다. 사업부문별 소속 등록 공인 회계사의 경력기간 및 변동 현황
 - 라. 사업부문별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 바.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서 감사업무의 품질 관련 지표의 비중
 - 사. 회계법인의 예산 중 품질관리업무 관련 예산의 비중
2. 운영체제
 - 가.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
 - 나. 수습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
 - 다. 심리(외국제휴법인이 수행한 심리를 포함한다) 및 관련 문서보관체계 현황
3. 최근 3년간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를 받은 결과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내용
 - 나. 감리집행기관이 감리 또는 평가를 한 결과 개선을 권고한 사항의 이행 상황

[별표 6] 수시 보고 사항(제22조제4항 관련) <개정 2022. 5. 3.>

1.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사유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다)
 - 나. 독립성 위반에 관한 사항
 - 다.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감사인으로 신규등록, 등록철회, 등록취소 등 변동에 관한 사항
2. 회계법인의 경영일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상호의 변경
 - 나. 정관의 변경(단, 사원·이사의 변경 및 다른 수시보고사항으로 인해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선임과 해임
 - 라. 삭제
 - 마.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 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
 - 사. 외국법인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 아.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항(특수관계자 추가 및 해제 등)

3.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가. 외국감독기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1 제2호는 제외한다.
- 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국 감독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라. 국내외 행정·사법기관 및 감독기관(금융위원회는 제외한다) 등으로부터 자기자본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 마. 회계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 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경영분쟁이 발생한 경우
- 사. 소속 이사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아. 주요 출자자원(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 이사 등 임직원이 횡령, 위조,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감사, 증권, 세무, 은행, 소비자보호, 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0)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면제사유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 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2 이상 ~ 2.6 미만	15%	350%
1.8 이상 ~ 2.2 미만	10%	250%
1.4 이상 ~ 1.8 미만	5%	150%
1.4 미만	2%	50%

-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중요도		가중치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위법행위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중요도		가중치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 정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 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 가.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기준금액이 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마.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바.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 가. 예정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나. 위반결과

- 1) "중대"란,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2) "보통"이란, '중대' ,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3) "경미"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위반동기

- 1) "상"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란,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결과 및 위반동기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다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가중사유

-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그 밖의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사유

- 1) 위법행위를 감리집행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법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법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제2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 다.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회사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해당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해당 회사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마.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가.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	보통	경미
제2호 나목1)	제2호 나목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한 경우

나. 제4호사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치대상 회계연도에 위반회사의 임직원수가 5명 이하이거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회사의 인력구조, 회사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서식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다.

- 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인의 등록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담당자를 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제23조의 회피사유를 준용하여 담당자를 선정한다.

제5조(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

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

1. 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
2.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등록심사결과
4.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등록결정 내용과 통보일
5. 등록취소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①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제3장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약체결보고서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한다.

② 회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보고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외한다)를 감독원장에게 대리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따른다.

②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5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이하 이 호에서 "법규위반 지정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
2. 제1호 이외의 회사 : 1개 사업연도

제11조(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① 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영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② 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대상 선정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감사인 지정의 신청)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

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①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①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

③ 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④ 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
3. 삭제

제18조(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정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3 서식
2. 지정받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4 서식

제4장 심사, 감리업무

제1절 심사, 감리절차 및 방법

제19조(감리의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

③ 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사, 감리의 구분
 2. 심사, 감리할 사항
 3. 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심사, 감리의 범위
 5. 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6. 심사, 감리담당직원
 7. 소요경비
 8. 기타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심사, 감리·조사의 범위) ① 심사, 감리·조사업무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조직·업무부문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 실시) 규정 제2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

제22조(심사, 감리반의 편성) ① 심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사,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심사, 감리·조사의 회피) 심사,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제24조(감리·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조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을 심사, 감리·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재산상태의 조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금융감독원의 「문서관리절차」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23호, 제25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①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 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감리기간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사·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관계법규·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 감리결과 처리

제35조(심사, 감리결과 보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외)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또는 심의, 감독원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이하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사,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이의신청, 재심사항 포함)
2. 관련 입증자료
3. 기타 제재심의 관련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7조(제재심의의 관련 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의 관련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의 관련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의 관련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의 관련 심사·조정결과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의2(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
 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
 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
 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 ③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8조(심사, 감리결과와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
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6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감독원장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

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한다.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제9999호, 2023. 7.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전면 개정 2019.3.29., 2021.2.8., 2022.9.29., 2023.7.20.〉

심사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일반원칙

1. 기본원칙

-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나. 위법행위가 동일 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 라.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 마. 감리결과 「외부감사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바.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사. 회사(회사 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각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 바.에 의하여 각 산출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아.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 자.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 차.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를 할 수 있다.
- 카. 이미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조치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도 조치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다.
 - 2)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종전 조치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받았을 조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타.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와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VI.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파.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와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시에는 감사인 등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 여부 및 동기 등을 판단한다.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되 다음 가. 부터 차.까지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 가. 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 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 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규모금액을 산정한다.

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를 계산할 때 각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상향하여 적용한다.

-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피투자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거나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등)되지 않는 경우
-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V.2.에 의해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이라도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금액이 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에 따른 감경

비중*	감경
40% 이상	—
10% 이상 ~ 40% 미만	1단계
10% 미만	2단계

* MAX = [자산비중, 부채비중, 매출액비중, 매출원가비중]

차.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요도가 최소 조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 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2)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IV.2.에 따른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V.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 1) 특수관계자 거래
-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규모금액: "표1"의 규모금액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금액의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산정한다.

- ①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 ②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유형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③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 유형별 규모배수를 합산하여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④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환산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⑤ D유형은 유형별 규모배수를 6배로 제한한다. 동 한도 적용은 위법동기별로 환산하기 전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 및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중요도	I	II	III	IV	V
규모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V.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I 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직무정지 6월 이내
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1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I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경고
I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없음

- ※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II.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나.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감사위원포함. 이하 같음) 등의 해임(면직) 권고 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병과한다.
- 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라. 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마.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사. 「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I 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I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II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III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IV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의
V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 없음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II.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에 더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I 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I	등록취소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II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III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경고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직무연수 2시간
IV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 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주의
V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 ※가.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 나.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조치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기간 동안 「외부감사법」 상 감사 관련 모든 업무(감사계약 체결, 중간기말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와 「자본시장법」 상 분·반기 검토업무를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 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행위 ‘과실’의 조치 특례

「외부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 또는 심사를 거쳐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중요도가 가중시 최대, I 또는 II에 해

당하더라도 경고 등(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제외 점수 부과 및 직무연수 조치 가능)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감리 및 종전의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법행위도 과실이고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 공시 과정에서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기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조치 종류	직무일부정지 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경고

※ 1.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법 [별표2] 5. 및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 중요도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설계 및 운영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경미 :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업무체계가 대부분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미흡 등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감사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보다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공인 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7. 회사의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서 Ⅲ.1.가.4) 가) 또는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성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위법행위 관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V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V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V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 조치와 중과실 V단계 조치(감사절차위반 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한 조치) 중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등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3.가.3) (VI.4. 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4)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7), 8)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나.4) (VI.4. 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5)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11), 12)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 3)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7)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IV.2.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 9)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

재된 일자'로 보되 동 기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4) IV.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3.나.10)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회사가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4)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를 통지받은 시점(금융감독원장이 심사·감리 실시 이전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시점) 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검사착수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일, 조회공시요구일 등은 해당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본다. 한편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 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공시한 경우
- 5)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한 경우. 다만, 4)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정공시 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금융감독원장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일반적·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과 직접 관련된 사항
-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방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4) 또는 5)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8)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가.4)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회사가 가.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7) 회사가 가.4) 또는 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하여 가.4) 또는 5)에 따른 감경시한 내에 감사의견 등을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
-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9)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への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への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 전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11)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2)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의결 시까지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하는 등 범법반 상태를 시정·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5), 6),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수정공시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 재발행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
- 13)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 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다음의 1),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신고 또는 고지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

-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할 수 있다.
-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 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이하 "중간감독자"라 한다)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중과실 IV단계) 이하의 조치를 하는 경우 또는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책임 소홀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 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 2)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의 내용, 감사증거 및 감사결론, 등 내용의 적절한 문서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 3) 기타 1), 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중간감독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감독자 중 최상위의 중간감독자를 조치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책임자(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조치대상으로 한다.
- 라. 중간감독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 관여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 마.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되,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할 수 있다.

VIII.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나.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인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 라.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 고에 더하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고발등을 할 수 있다.
- 마.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표1>

규모금액산출표

1. 규모금액의 산출

- 가. 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억원
- 나.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억원
- 다. 회사의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2) : 억원
- 라. "다"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마. 규모금액[다(가 또는 나) ÷ 라]: 원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대상기간이 분·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반기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규모금액"은 위법행위 유형별로 아래 ①부터 ④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완전자본잠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자산총계를 부채총계로 보며, ①에 해당되면서 ② 또는 ③에도 해당하는 D유형의 경우, ①을 ②, ③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 A, C유형 전체
 - ㉡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 ㉢ D유형 중 다음의 주석기재사항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
 -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D유형 사항
- ②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를 규모금액으로 한다.
- ㉠ B유형 중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 ㉡ D유형 중 자산·부채와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 ③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매출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 B유형 중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 ㉡ D유형 중 수익·비용과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 ④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자산총계의 30% 미만이라도 자산총계의 30%를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규모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VI.3.가.1) 또는 VI.3.나.1)에 따른 감경 적용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 나) 거래소로부터 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받은 법인
 - 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마) 금융회사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0.4	—	
100	300	0.6	+ 0.00100000	×
300	700	0.8	+ 0.00050000	×
700	1,000	1.0	+ 0.00066667	×
1,000	2,000	1.2	+ 0.00030000	×
2,000	5,000	1.5	+ 0.00010000	×
5,000	10,000	1.8	+ 0.00006000	×
10,000	20,000	2.1	+ 0.00003000	×
20,000	50,000	2.4	+ 0.00002000	×
50,000	100,000	3.0	+ 0.00001200	×
100,000	200,000	3.6	+ 0.00000700	×
200,000	500,000	4.3	+ 0.00000233	×
500,000	1,000,000	5.0	+ 0.00000400	×
1,000,000	2,000,000	7.0	+ 0.00000300	×
2,000,000	—	10.0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에정법인 및 금융회사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규모배수 합산방식

-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다만, 위법동기가 과실인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도 과실로 환산에서 제외한다.
- [별표 1] IV.3①부터 ③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규모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규모배수를 합산한다.

가.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1배	1/8배

나.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8배	1배

3. 2.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4. 1.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3.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을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1.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검찰고발·통보는 4.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6.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규모배수를 단순합산하여 계산한다.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

위법 동기	중요도						감경시 최소
	가중시 최대	I	II	III	IV	V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 ※ 지정제외점수의 부과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 제1호"에 의한 가중·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1호 V.6.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250점을 부과한다.
2. 지정제외점수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는 경우 동 집행정지기간 동안 지정제외점수의 유효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며,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나머지 유효기간이 진행된다.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사조서의 보존의무 및 위조 등 금지의무 위반행위(이하 감사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일반원칙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이하 이들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양정은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요도 및 발생 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검찰고발·통보·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3.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담당 이사 및 담당 공인회계사로 하고,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감사조서 보존의무위반행위 및 위조·변조, 훼손·파기 등 행위의 행위자로 한다. 다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또는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4.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위법동기의 유형

감사인, 담당 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나. 중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다. 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2. 감사인, 담당 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 각각의 위법동기는 개별적인 행위 등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3. 감사인이 자신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 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고, 감사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용실태를 근거로 판단한다.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정상작동 판단 기준(재무적 이해관계 관련)>

일반사항	위법행위 관련 사항
①연간 1회 이상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으로부터 독립성의무 준수 확인서 징구	①감사인의 위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내부징계
②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보유주식(지분 포함) 및 배우자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②독립성 침해 위험의 제거·감소를 위한 노력
③감사기간 중 담당 이사에 의한 감사참여자(배우자 포함)의 보유주식(지분 포함) 확인	③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근거(기록) 유지 등 적극적인 독립성 유지 관련 교육
④표본 추출을 통해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IV. 위법행위의 중요도 판단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재무적 이해관계 금액, 경제적 이익의 보수에 대한 비율, 독립성 침해의 정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I. 회계법인의 이해관계(법 § 9③, 「공인회계사법」 § 33①)			
① 회계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② 과거 1년 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담당사원이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	담당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	담당사원 및 배우자가 재무와 관련 없는 임원인 경우
③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채권·채무가 3억원 이상	채권·채무가 1.5억원~3억원 미만	채권·채무가 1억원~1.5억원 미만
④ 회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회계법인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6억원 이상	이득액이 연 2억원~6억원 미만	이득액이 연 2억원미만
⑤ 회계법인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 회계법인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 미만
I-1. 회계법인 사원의 이해관계(법 § 9③, 「공인회계사법」 § 21①, § 33①)			

① 사원 또는 배우자가 피감회사의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인 경우	과거 1년 내에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이었던 경우	-
②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③ 사원 또는 배우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채권·채무가 1억원 이상	채권·채무가 3천만원~1억원 미만	채권·채무가 3천만원 미만
④ 사원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9천만원 이상	이득액이 연 3천만원 ~ 9천만원 미만	이득액이 연 3천만원 미만
⑤ 사원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 사원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 미만
II. 연속기간 감사금지(법 § 9⑤~⑦)			
① 회계법인의 동일이사 교체의무(연속 6개 연도 감사업무 제한,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연속 4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독립성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②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조자로 함에 있어 동일 보조자에게 해당회사의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의 2/3 이상 교체	독립성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③ 감사반이 상장법인의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참여 공인회계사의 2/3 이상 교체			
III.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법 §6⑥)			
①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독립성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독립성 침해가 경미한 경우
②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			
③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④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결정 관여			

주) 중대성 여부는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의 비율' [50% 이상(중대), 10% ~ 50% 미만(보통), 10% 미만(경미)], '제공 비감사용역의 범위' (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결과' (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시기' (기말결산시기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대형비상장 주식회사·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법 §19②)	—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조서 위조·변조(법 §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조서 훼손주3·파기(법 §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 주1)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인 경우
 주2)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니더라도 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어야 함
 주3) 감사조서의 동일성에 차이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훼손은 조치하지 않음

V.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1. 기본조치기준

가. 위법행위의 위반동기 및 위반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 2.부터 3.’에 의한 조치기준을 적용하며,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게는 동 시행세칙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에 의한 지정제외점수도 부과한다. 다만,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위반동기 위반중요도	고의	중과실	과 실
중대	고의Ⅲ	중과실Ⅱ	과실Ⅱ
보통	고의Ⅳ	중과실Ⅲ	과실Ⅲ
경미	중과실Ⅲ	중과실Ⅳ	과실Ⅳ
감경시 최소	중과실Ⅳ	과실Ⅲ	과실Ⅴ

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주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제외점수를 50% 감경한다.

주) 독립성 의무 위반시점에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목적법인

- ①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 ②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④ 금융회사
- ⑤ 기타 위반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2. 2개 이상 위법행위의 경합시 조치기준

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동일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IV.1항’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IV.2항’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의 동일 줄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본다)는

각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각 회계연도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나. 2개 이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발생한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는 각 감사보고서 단위로 구분하고, 각 감사보고서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다. 2개 이상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2개 이상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종류(‘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각각 별개의 위반종류로 본다)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 위 ‘가~마항’은 감사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 산정을 위한 기준인 바, 동 기준을 통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바항’과 같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바.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각 회사별로 조치수준(가중·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직무)정지(감사인, 공인회계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주2(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감사인,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주3(공인회계사) ■직무연수(공인회계사) ■지정제외점수 부과(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취소(감사인, 공인회계사) ■경고, 주의주4(감사인, 공인회계사)

주1) 합산시 최대 한도 : 업무(전부·일부)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직무일부정지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당해 회사),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지정제외점수 300점

주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

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주3) 다수의 감사업무제한 조치 중 제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조치를 한다.

주4) 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기본원칙

- 가. 위법행위가 아래의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2. 나. 2)항'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자체발견 및 시정조치)의 감경사유는 각 하위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
- 나. 다수의 감경사유가 적용되더라도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의 자체발견 및 시정으로 인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시에는 '감경시 최소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최종 조치수준 결정이 가능하다(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치생략 가능).
-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 경합 가중으로 조치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가.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 1)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감사인이 자체발견하여 시정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동일 회사에 대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5)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 1)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 감경사유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감사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동 감경사유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 정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발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예시: 감사인 임직원의 배우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비상장주식 등 재무정보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 ② 계약해지 또는 독립성의무 위반이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발견되어 적절한 사후조치(예시: 위반자를 업무에서 제외, 업무 재수행 등)를 통해 독립성 침해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③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 ④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사유 등으로 감사인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대상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4) 감사인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
 -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감경
- 가.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 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4)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대상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실태가 양호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5)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 가. 감사인, 공인회계사(담당 이사 포함)가 독립성의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자의 의도적인 위법행위 은폐, 허위보고 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위법행위

로 인한 감사인,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 다. 위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신고자가 신고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 3)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그 위법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VII.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주책임자, 해당 업무의 감독자를 감독책임자, 해당 업무의 보조자를 보조책임자로 각각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 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법행위의 지시 또는 강요를 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 또는 강요자도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 2019.3.29., 2021.10.1., 2022.9.29., 2023.7.20.〉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일반원칙

- 가.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제출기한 이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로 본다.
- 나.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수시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수시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철회 및 재발행(감사의견의 변경이 없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한한다)을 수시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의 유예기간은 제출기한 경과후 각각 7일과 3일로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의 최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종일로 한다.
- 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가능성 인식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구분한다.
- 마. 사업보고서 등에 이종의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 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은 기재·표시의 오류·누락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기준금액의 산정은 별표1 IV. 2. 나.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A~D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제출의무 위반은 D유형으로 본다.)의 4배 이상인 경우. 다만, 관련 금액이 없어 규모배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업보고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합산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 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IV.2.다.에 의한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II. 조치기준

1. 사업보고서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150점
I.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II.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	60점
III.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누락	30점
IV. 기재사항의 오류	20점
V. 비치·공시의무 위반	10점
감경시 최소	경고

2. 수시보고서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60점
I.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40점
II. 기재사항의 누락	20점
III.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오류	10점
감경시 최소주)	경고

주) 위 표에서 위반 유형이 ‘II’ 또는 ‘III’에 해당되고, 최종 감경단계(가중단계 차감 후)가 각각 3단계 또는 2단계 이상인 경우 ‘조치없음’을 부과할 수 있다.

IV.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등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사업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나.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의무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2개 이상(동일한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법 시행 후 최초 2년간(2019. 11. 1. ~ 2021. 10. 31.)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또는 2021.10.1.이후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나. 위반일 현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

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정정한 경우

라. 수시보고서 미제출, 서면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수시보고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제출하거나 정정한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외부감사법 별표 1 제15호의 위반행위를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후 3일 이내에 시정한 경우(다만, 시정일수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V.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계량지표(23개) 및 비계량지표(11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구 분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V	-
	1-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V	-
	1-③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V	-
	2-② 독립성 위반	V	-
	2-③ 윤리기준 위반	V	-
	2-④ 독립성 · 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V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3-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V	-
	3-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V	-
	3-③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 인적자원	4-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V	-
	4-② 감사인력 유지율	V	-
	4-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V	-
	4-④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⑤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 업무의 수행	5-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V	-
	5-② 사전심리시간	V	-
	5-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V	-
	5-④ 전문가 활용	V	-
	5-⑤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⑥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⑦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6. 모니터링	6-① 사후심리시간	V	-
	6-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비율	V	-
	6-③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상태지표>			
7. 감리결과 등	7-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 · 감리결과	V	-
	7-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 · 감리결과	V	-
	7-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V	-
	7-④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7-⑤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7-⑥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7-⑦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동태지표>			
8. 감사품질 개선 정도	8-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V	-
	8-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V	-

가. 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 $\text{품질관리 전담인력 수} \div \text{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최소 기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 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 $\text{품질관리 전담인력 총 투입시간} \div \text{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가용시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 $\text{독립성 점검 대상자수} \div \text{독립성 담당 인력수}$
- ② 독립성 위반 = 최근 3년간 독립성 위반 조치건수
- ③ 윤리기준 등 위반 = 최근 3년간 윤리기준 등 위반 조치건수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 $\text{사전위험평가 실시 업무수} \div \text{사전위험평가 대상 업무수}$
- 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 $\text{회계감사업무 매출액} \div \text{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4) 인적자원

- 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 $\text{등록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비율}$
- ② 감사인력 유지율 = $1 - (\text{최근 1년내 퇴사한 등록공인회계사수} \div \text{연평균 등록공인회계사수})$
- 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 $\text{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시간} \div \text{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 가용시간}$

5) 업무의 수행

- 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 $\text{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div \text{업무수행이사의 총 감사시간}$
- ② 사전심리시간 = $\text{사전심리시간} \div \text{사전심리 실시 회사의 총 감사시간}$
- 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 $\text{입증감사 전 사전심리시간} \div \text{총 사전심리시간}$
- ④ 전문가 활용 = $\text{전문가 투입시간} \div \text{총 감사시간}$

6) 모니터링

- ① 사후심리시간 = $\text{사후심리시간} \div \text{총 감사시간}$
- 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 비율 = $\text{사후심리 실시 회사수} \div \text{감사대상 회사수}$

(2) 상태지표

- 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text{지정제외점수(환산)} \div \text{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text{지정제외점수(환산)} \div \text{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 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 감사인이 감사한 상장·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 개수 ÷ 관련 감사보고서수
- ④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수
- ⑤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평균 지적사항 수

(3) 동태지표

- 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재지적사항 개수 혹은 이행 기한이 경과한 미이행사항 유무
- 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 일정 수준 이상의 당기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또는 전기 대비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증가

나.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1) 역량지표 : 품질위험(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나 운영 미흡 등으로 감사품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한 미흡사항 여부에 따라 평가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품질지향 내부문화 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보상체계에 불구하고 영업성과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결정된다.
	품질관리인력의 권한이 부족하여 적시에 품질 관련 이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품질관리인력의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품질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구성원의 직책 및 직급별로 권한, 의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독립성 · 윤리 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독립성 점검시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다.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나 독립성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제출시킨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독립성 준수 의무자 목록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있다.
	독립성 준수 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 회사가 있다.
	동일한 이사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체 의무를 위반하여 연속하는 회계연도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독립성 검토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수임 · 유지가 결정된다.
	독립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의 수임 · 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업무의 수임 · 유지 결정 이후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비감사 업무를 수임한다.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주식소유 등 이해관계, 재무제표 대리작성, 담당이사 등 교체의무 위반 등)하였음에도 품질관리실 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독립성 위반이나 독립성 관련 감사인의 정책 및 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 · 유지가 결정된다.
	위험평가가 감사계약 체결 후 완료된다.
	위험평가가 개인별, 사무소(본점, 분사무소 등)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의 수임 · 유지가 이루어진다.
	위험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입력시 작성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입력된다.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가용자원, 산업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 · 유지를 결정한다.
	업무수임과 관련하여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업무수용 · 유지 결정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아니한다.

4) 인적자원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감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업무수행이사 및 참여자의 산업전문성이나 경험, 권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업무수행이사나 업무참여자에게 과다한 업무(감사 및 비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한다.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직 기준과 관계법규 등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다.
	업무수행시간(time report)의 입력, 수정, 승인권한 등의 업무분장이 부적절하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지연 입력되거나 누락된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과다 또는 과소 입력된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로 집계된 업무수행시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내부 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이 불일치한다.
	감사시간 이외 업무시간(비감사업무, 행정업무 등)을 집계하지 않아 집계된 시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5) 업무의 수행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업무수행참여자가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수행한다.
	업무담당이사나 참여자 등이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품질관리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감사대상 기업 및 동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감사위험의 평가결과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
	감사대상회사의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요함에도 감사계획이나 감사절차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
	감사업무 수행시 담당이사가 지시, 감독, 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아니한다.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관련 기준, 내규 등에 따라 사전심리대상 회사로 분류되어야 할 회사가 사전심리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설계 및 운영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발행 또는 감사보고서 파일의 유출 등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하거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검토 관련 정책에 따르지 않고 사전심리를 수행한다.
	사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사조서 관리	감사조서가 취합되지 않거나,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경과하여 취합이 완료된다.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취합된 감사조서를 취합기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감사조서리스트와 실제 보관하고 있는 감사조서 목록,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감사조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무단반출이 가능하다.

6) 모니터링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담당자 혹은 업무수행이사가 사후심리를 담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사후심리담당자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심리대상이 선정된다.
	사후심리대상 선정시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
	사후심리결과가 업무수행이사 및 법인내 적합한 개인들(예: 최고경영자, 품질관리실장 또는 적합한 경우 사원총회 등 포함)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사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한다.
	사후심리결과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수정조치 권고사항이 미이행되거나 그 이행내용이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에 부적합하다.

(2) 상태지표 : 개선권고사항의 질적형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

- ①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②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ombudsman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 ② 중소기업 ombudsman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라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ombudsman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 ④ 또한 중소기업 ombudsman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

- ⑤ 아울러, 중소기업 ombudsman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ombudsman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ombudsman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u>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u> 중소기업 ombudsman 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ombudsman 을 둔다.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① -----규제를 정비 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이 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의견 제출 자 보호 조치
<u><신 설></u>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
<u><신 설></u>	5.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생략)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 설>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6. -----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월 말일 -----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 및 제2호 -----
-----.
-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해당 권고 -----
-----.
-----.

⑧ ----- 제7항 -----

-----.

<신 설>

<신 설>

⑧·⑨ (생 략)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⑪·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
-----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행정규제
기본법」 제17조-----
-----.

② -----
업무기관-----

-----.

③ -----
----- 업무기관-----

-----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
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 등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지원 등) ①·② (생략)

<신설>

④ ----- 규제개선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 담당공무원 및 임직원 -----

-----.

제24조(행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과 기업의 공시 준비 안내

- 한국회계기준원 -

1

개요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
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 2023년 11월 9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3년 9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를 개정
- 2023년 12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

2

개정 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개정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한 법률(이하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도 하지 않도록 강제함(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소급 적용)
-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2023년 말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 ②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공시에 대한 판단>

- 필라2 법률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2024년 초 시행 목표, 2022년 말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4분기에 확정 공표되면 2023년에도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① 효력 발생 전 공시(익스포저 관련 공시)'를 해야 함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개정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제공과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공시 요구는 K-IFRS 개정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을 추가 제공하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공시는 요구하지 아니함
 -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를 발생한 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3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준비

- (부담 경감) 필라2 법인세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 (공시 준비) 2023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을 공시하고, K-IFRS 적용기업은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전 공시(2023 회계연도에 한정됨)를 해야 함
- 또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추가 공시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

붙임. 개정 K-IFRS 상세 내용

※ 다음 내용은 2023년 11월 24일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안(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서 발췌한 것임

본문

적용범위

- 4A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하, 이러한 세법과 그 세법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각각 '필라2 법률', '필라2 법인세'라고 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시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 88A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
- 88B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88C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88D 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

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 (2) 다음 (가) 또는 (나)와 같은 양적 정보
 - (가)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나)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

시행일

98M 2023년 x월에 공표한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에 따라 문단 4A와 88A~88D를 추가하였다.

- (1) 문단 4A와 88A는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는 즉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 (2)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도출근거

공시

법률 시행일 도래 전의 기간

공시 목적

BC107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 제정된 법률은 그 기간 법인세비용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익스포저를 만들 수 있고,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다른 정보에서 이러한 익스포저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 수요에 기초하여 공시 목적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

BC108 IASB는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기업은 필라2 법률을 따르기 위한 준비와 기업의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기업이 그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기업이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정보를 공시하는 효익이 공시를 작성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 (1)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에 비추어 IAS 12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정보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그 공시 요구사항은 소수 보고기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오직 소수 보고기간 때문에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업의 원가(예: 새로운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BC109 검토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일부 국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법

률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이 자신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일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이미 자신의 익스포저 평가가 상당히 진행되어 현재 법인세 회계에 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BC110 문단 BC108~BC109에서 논의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공시 목적을 이루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지만,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항목이나 그 정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접근법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 (2)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 적용되는 IAS 8 문단 30~31의 요구사항과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이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11 IASB 위원 일부는 기업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일부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 위원 일부는 검토 의견을 고려한 후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많은 기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한 후 IASB 위원 다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 충족과 그러한 정보 보고원가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12 BC112 또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에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양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IASB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모두가 필요하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의 예시를 포함하였다.

- (2) 보고기간 말 기업의 상황에 기초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가능성 있는 미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미래전망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 이익을 예측하거나, 미래 기간에 예상되는 경감 조치를 반영하거나, 세법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BC113 더욱이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필라2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더라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그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않는, 단순화된 기준으로 작성된다.
- (2) 정확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

법률이 시행되는 기간

BC114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이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 전체 법인세와 비교하여 필라2 법인세의 규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기업은 이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작성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일(수)	11월 2일(목)	11월 3일(금)	11월 6일(월)	11월 7일(화)
미 달 러 (USD)	1349.60	1356.90	1343.20	1325.80	1303.20
위 안 화 (CNH)	184.29	185.02	183.20	180.49	178.58
일 본 엔 (JPY)	892.39	900.64	892.67	887.27	868.80
유 로 화 (EUR)	1427.88	1435.46	1426.08	1421.85	1397.16
영 국 파 운 드 (GBP)	1640.10	1651.28	1638.17	1640.61	1608.80
캐 나 다 달 러 (CAD)	973.04	980.03	977.30	970.57	951.35
홍 콩 달 러 (HKD)	172.50	173.44	171.66	169.45	166.63

통 화 명	11월 8일(수)	11월 9일(목)	11월 10일(금)	11월 13일(월)	11월 14일(화)
미 달 러 (USD)	1306.10	1305.50	1309.00	1316.70	1322.70
위 안 화 (CNH)	179.41	179.22	179.36	180.30	181.20
일 본 엔 (JPY)	868.62	865.23	864.94	869.22	872.12
유 로 화 (EUR)	1397.27	1398.06	1396.31	1407.42	1415.29
영 국 파 운 드 (GBP)	1605.98	1603.81	1599.60	1610.13	1624.34
캐 나 다 달 러 (CAD)	948.79	946.46	947.76	954.23	958.13
홍 콩 달 러 (HKD)	167.03	167.06	167.62	168.57	169.40

통 화 명	11월 15일(수)	11월 16일(목)	11월 17일(금)	11월 20일(월)	11월 21일(화)	11월 22일(수)
미 달 러 (USD)	1325.30	1302.00	1303.90	1294.40	1292.40	1287.70
위 안 화 (CNH)	181.68	179.41	179.49	178.38	179.57	180.22
일 본 엔 (JPY)	881.07	860.66	865.29	864.58	871.89	869.57
유 로 화 (EUR)	1441.99	1412.54	1415.25	1412.26	1414.40	1405.46
영 국 파 운 드 (GBP)	1656.23	1616.63	1618.86	1612.63	1617.05	1614.97
캐 나 다 달 러 (CAD)	967.76	951.62	948.02	943.58	941.85	940.00
홍 콩 달 러 (HKD)	169.78	166.78	167.12	166.04	165.85	165.18

통 화 명	11월 23일(목)	11월 24일(금)	11월 27일(월)	11월 28일(화)	11월 29일(수)	11월 30일(목)
미 달 러 (USD)	1295.70	1298.70	1302.10	1304.70	1294.00	1289.00
위 안 화 (CNH)	181.31	181.61	182.04	182.54	180.74	180.91
일 본 엔 (JPY)	866.54	868.26	870.82	878.08	878.27	877.29
유 로 화 (EUR)	1410.69	1416.23	1424.76	1429.49	1422.88	1414.16
영 국 파 운 드 (GBP)	1618.72	1627.79	1640.78	1647.84	1643.38	1636.39
캐 나 다 달 러 (CAD)	946.66	948.20	955.60	958.25	953.54	948.56
홍 콩 달 러 (HKD)	166.19	166.54	167.10	167.47	166.00	165.15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증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증개 홈페이지(<http://www.smbi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